KRIHS POLICY BRIEF
국토정책 Brief
제 407 호 2012. 11. 5

고령자 인구이동과 국토·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

민성희(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), 박정호(국토연구원 연구원)

-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지역 간 인구이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, 고령화 진전으로 총이동인구 중 고령자(65세 이상)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  - 1995년 3.7%이던 고령자 비중이 2010년 6.1%로 1.6배 증가
- 고령자 인구이동과 함께 경제활동 인구이동도 계속되면서 지역 간 고령화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
  - 2010년에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고령자 전입이 고령자 전출보다 많았던 시군구가 절반(112개)에 달하고, 경제활동인구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시군구는 1/3(85개)에 이름
- 고령자 인구의 이동에는 주택 관련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  - 고령자 인구이동의 가장 주된 요인(41.8%)은 주택 매매, 소유관계 변화 등 주택과 관련된 요인이었으며, 주택 관련 요인에 따른 이동은 국토 전반에 걸쳐 나타남

| 정 | 책 | 적 | 시 | 사 | 점 |

"고령화 시대의 인구이동에 대응하는 국토 · 지역정책이 필요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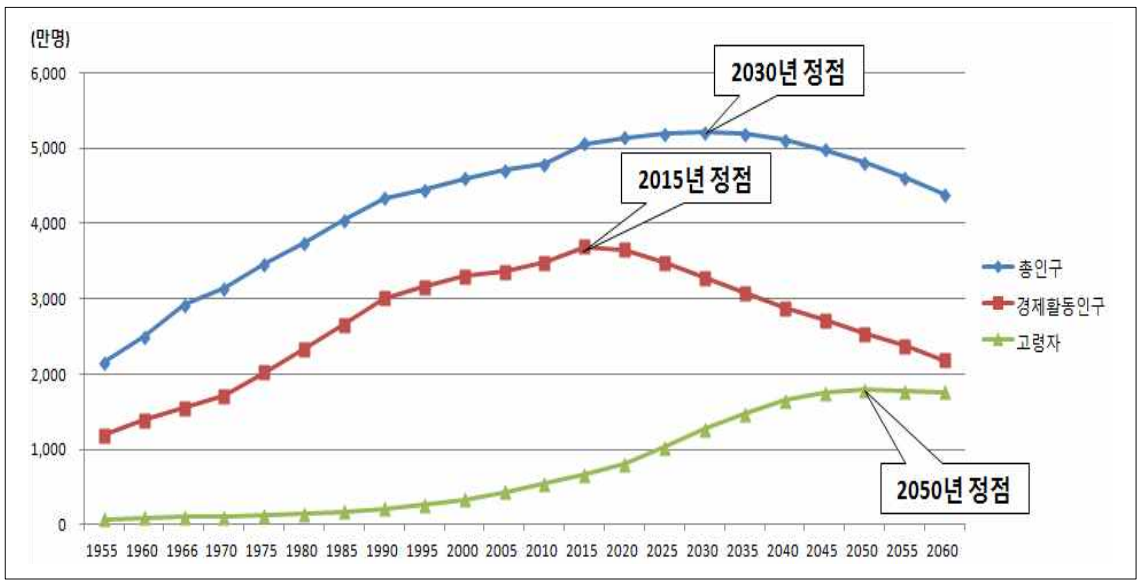
1. 고령화에 활기차게 대응(Active Aging)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고령자 인구의 이동 증가 및 새로운 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
2. 고령자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이동으로 인한 고령화 수준의 지역 간 격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프트웨어(Software) 측면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발 · 공급이 긴요
3. 65세 이상 1~2인 가구의 증가, 주택 관련 요인에 따른 고령자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의 주요계층으로 부상하는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시급

1. 고령화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 추이

고령화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

-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(7% 이상)에 진입한 후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, 2018년에 고령사회(14% 이상), 2026년에 초고령사회(20% 이상) 진입을 각각 앞두고 있음
  - 의료기술 발달, 영양상태 개선,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기대수명은 2010년 79.6세에서 2030년 83.1세, 2050년 86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
  - 201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6.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, 2030년에는 2.6명당 노인 1명, 2050년에는 1.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견됨
- 인구추계자료(2010)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수(65세 이상)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 - 경제활동인구(15~64세)는 2015년 이후부터 감소하고, 총인구도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  - 고령화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고령화율이 증가하고, 65세 이상 1~2인 가구는 2035년까지 연평균 19만 6천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[ 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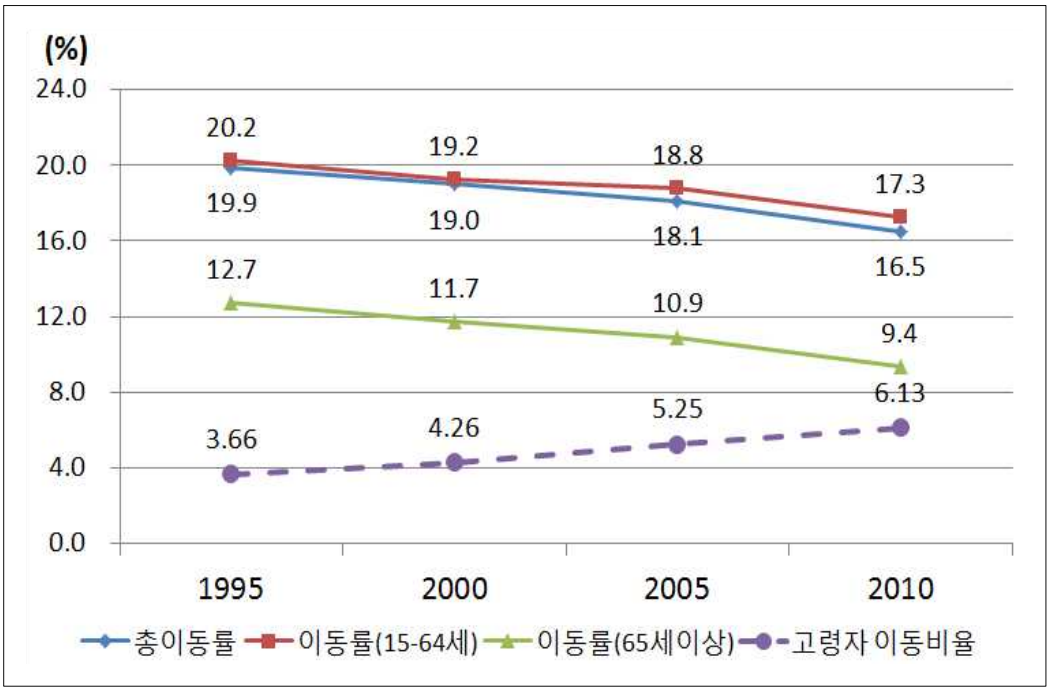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각 연도, 인구주택총조사.

고령화 시대의 인구이동 추이

■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, 고령화 진전과 고령이동자수 증가 등으로 총 이동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
- 전체 연령계층의 인구이동률은 1995년 19.9%에서 2010년 16.5%로 감소
- 그러나 총이동자 대비 고령자 이동률은 1995년 3.7%에서 2010년 6.1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향후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이동자수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
[ ]



자료: 통계청. 각 연도. 국내인구이동통계.

2. 고령자의 지역별 분포 및 인구이동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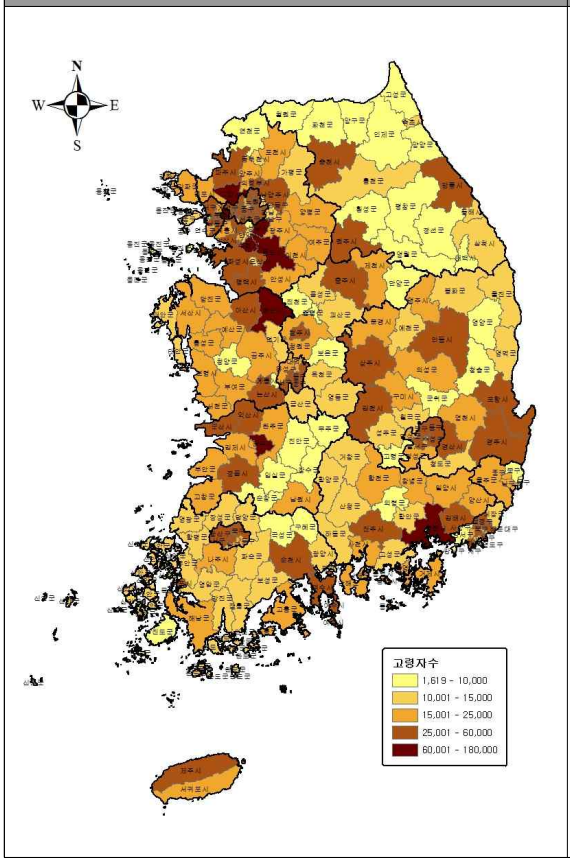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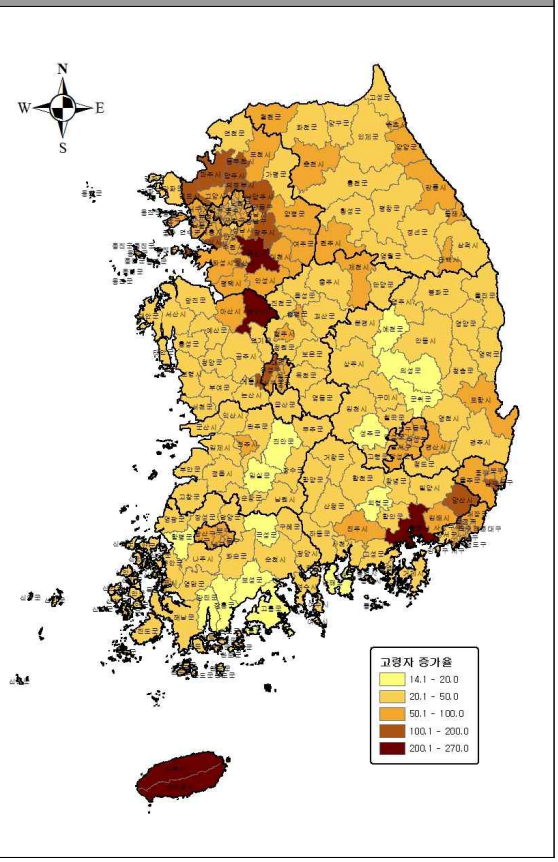
지역별 고령자 분포 현황

■ 고령거주자 및 고령자 비중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인구이동도 활발해지고 있으며, 전국 시군구 중 특히 창원시, 천안시, 용인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

- 고령자 인구로는 2010년 창원시가 17만 4,134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, 천안시, 고양시, 성남시, 용인시, 수원시, 부천시 등에도 고령자가 많이 거주

[ ]

(단위: 명, %)

고령자 인구수(2010)	고령자 증가율(2000~2010)
	

자료: 통계청. 각 연도. 인구주택총조사.

- 2000년과 2010년 사이 고령자 증가율은 용인시가 265.4%로 가장 높았으며, 서귀포시와 제주시, 천안시, 창원시의 고령자 증가율도 200% 이상을 나타냄

지역 간 고령자 인구이동 현황

■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바탕으로 한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, 전국 230개 시군구 중 고령자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시군구는 112개로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해당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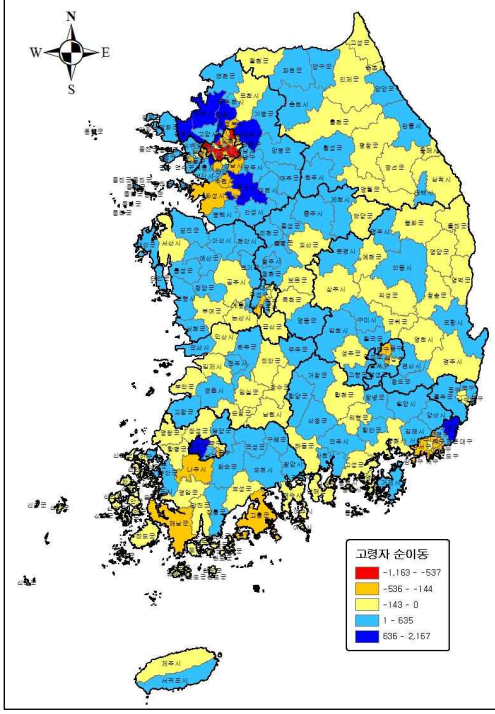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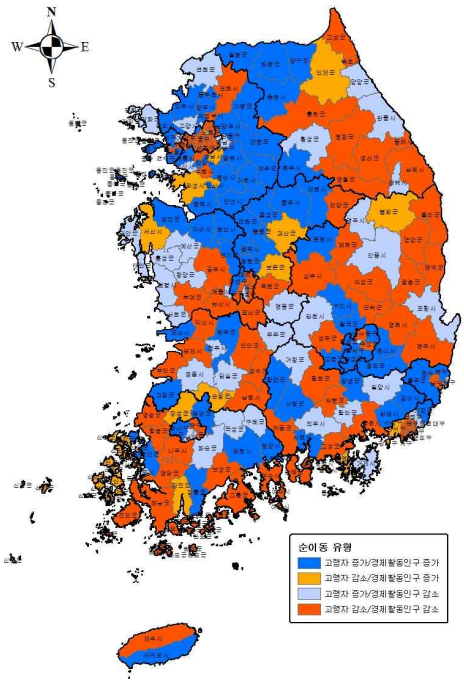
- 남양주시, 용인시, 오산시, 파주시, 광명시, 양주시 등 주로 경기도에서 고령자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반면, 서울에서는 고령자의 전출 초과현상이 두드러짐
-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시군구는 85개로 국토의 37.0% 수준에 머물러, 경제활동인구의 전입 초과에 비하여 고령자의 전입 초과현상이 전국 시군구에 확산되고 있음

■ 전국 230개 시군구를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순이동 증감에 따라 유형화하면,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 시군구는 30.0%, 고령자 증가·경제활동인구 감소 시군구는 18.7%,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시군구는 44.3%, 고령자 감소·경제활동인구 증가 시군구는 7.0%로 나타남

-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: 경기도 남양주시 등 서울 인근 지역과 부산 기장군, 광주 광산구 등에서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음
- 고령자 증가·경제활동인구 감소: 안산시, 목포시, 고양시 등에서 고령자는 늘어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음
-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: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감소한 상위 10개소에 서대문구, 영등포구 등 모두 서울시내 10개구가 해당
- 고령자 감소·경제활동인구 증가: 경기도 화성시, 서울 성북구 등에서 고령자는 감소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

[ ]

(단위: 명)

고령자 순이동자수(2010)	고령자·경제활동인구 순이동 유형(2010)
	

자료: 통계청. 2010. 국내인구이동통계.

3. 고령자 인구이동 요인

연령계층별 인구이동 요인(전입 기준)

■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 요인을 비교한 결과, 가장 주된 요인은 주택 관련 요인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, 그 외 요인에서는 양자 간에 차이를 드러냄

- 주택: 주택 매매, 소유관계 변화 등 주택 관련 요인은 고령자(41.8%)와 경제활동인구(40.7%)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주결정 시 주택 관련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줌
- 직업: 취업, 이직, 퇴직 등 직업 관련 요인에 의해 이동한 고령자는 3.5%에 그친 반면, 경제활동인구는 14.2%로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여줌
- 가족: 가족 구성원과 세대 구성, 세대 합가, 편입 등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동한 고령자의 비율은 23.1%,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6.2%로 나타나 고령자의 이동은 자식세대의 이동에 상대적으로 의존적임을 알 수 있음
- 건강: 정신적·육체적 건강상의 요인에 따라 이동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4.9%로 경제활동인구(0.7%)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
- 교육 및 교통: 교육, 교통수단 및 시설과 관련 요인으로 이동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남

[ ]

(단위: %)

전입사유 \ 연령대	고령자	경제활동인구	전체
주 택	41.8	40.7	42.3
직 업	3.5	14.2	12.5
가 족	23.1	16.2	16.0
건 강	4.9	0.7	0.9
교 육	0.4	2.4	3.0
교 통	0.3	0.8	0.7
기 타	25.9	25.0	24.7
합 계	100.0	100.0	100.0

자료: 통계청. 2010. 국내인구이동통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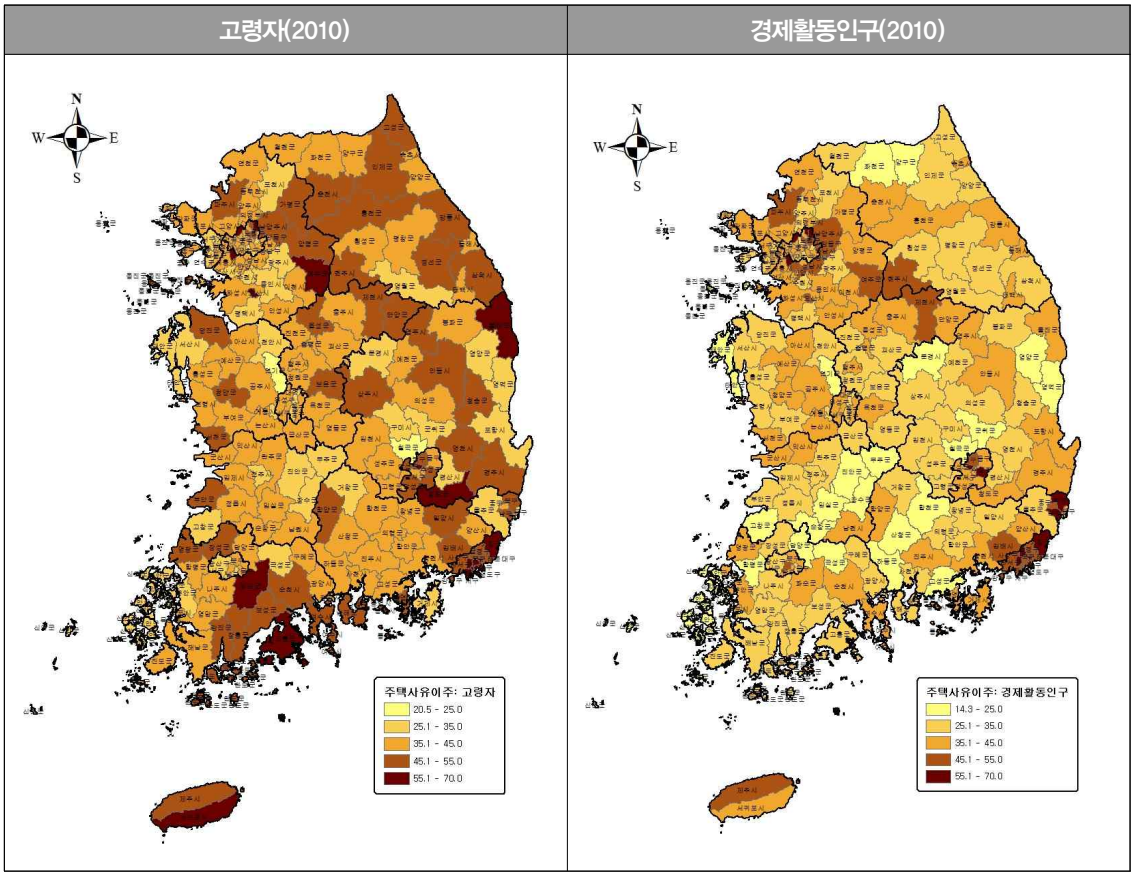
주택 관련 인구이동 현황

■ 인구이동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 주택 관련 요인 측면에서 시군구 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, 고령자의 경우 국토 전반에 걸쳐 신규 주거지를 찾아 이동한 반면에, 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대조를 이룸([그림 5] 참조)

- 다만, 서울 은평구, 부산 기장군 및 남구, 광명시 등은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주택 관련 인구이동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남

[ ]

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. 각 연도. 국내인구이동통계.

4. 정책적 시사점

■ 향후 고령자 이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입지와 전출지 모두 커다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므로 고령화 시대의 인구이동에 대응하는 국토 · 지역정책이 필요

-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 시대에는 국토이용 측면에서도 고령자들의 인구이동 및 주택수요를 반영한 국토 · 지역정책을 마련할 필요
-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따른 전 · 출입지의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· 경제 측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주거, 일자리, 의료 · 여가 · 문화 · 복지 등 고령자 관련 분야 정책이 필요
- 수도권, 부산권 등 대도시로의 이주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촌이주 고령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필요

■ 고령화에 활기차게 대응(Active Aging)하여,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고령자 인구의 이동 증가가 예상되므로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주거지를 이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

- 일본 도쿄에서는 1996년부터 교외지역 주택을 임대하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마이홈 임차제도인 JTI(Japan Trans-housing Institute)를 운영

■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간 고령화 수준의 차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(Software) 측면의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개발 · 공급할 필요

- 2010년 기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던 시군구는 국토 전반에 걸쳐 각각 1/2, 1/3에 달하였으며, 2000~2010년간 고령자 증가율은 최소 14.1%에서 최대 265.4%로 큰 차이를 보임
-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순이동 유형(증가 또는 감소)에 따라 고령화 정도가 지역 간에 차별화되고 이에 따라 고령자 복지서비스수요의 변화와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됨
- 지역별 고령자 복지서비스수요의 증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(Hardware)적인 노인주거 · 의료 · 여가복지시설 확대와 더불어, 고령자 복지서비스 탈시설화(Deinstitutionalization)를 위한 단기보호, 방문요양 · 목욕, 주 · 야간보호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소규모 실버커뮤니티 조성 등 소프트웨어(Software) 측면의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함

■ 65세 이상 1~2인 가구 증가, 고령자의 주택 관련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의 주요 계층으로 부상할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함

- 2010년 고령자 인구이동의 주된 요인은 '주택(41.8%)'으로 나타났으며, 국토 전반에 걸쳐 주택과 관련된 고령자 전입 비율이 높은 시 · 군 · 구는 고르게 분포함
-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주거지원계획 수립, 독거노인을 포함한 1~2인 고령가구의 주택개조비용 지원, 신규 고령 전입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원만한 정착을 지원하는 실버주거지원센터 설치 등 고령화 및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필요

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민성희 책임연구원 (shmin@krihs.re.kr, 031-380-0154)
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박정호 연구원 (junghopark@krihs.re.kr, 031-380-0387)

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
전화 031-380-0114 팩스 031-380-0470 홈페이지 www.krihs.re.kr

수록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 지난호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국토연구원 KRIHS